난치병 학생 학습권 보장

최영규 도의원 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

최영규 도의원(익산4)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22일 전북도의회 제3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암이나 심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등 치료가 어려운 병을 앓고 있는 도내 학생들도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총 15개 조항으로 구성된 '전라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향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1인당 500만 원 한도의 치료비 지원과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의 우선배치, 학교내 투약공간 마련 등 난치병 학생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영규 의원은 "난치병을 앓는 학생은 일상적인 학습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교육행정의 손길이 난치병 학생들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 게 현실"이라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청 차원에서는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이, 학교현장에서는 난치병 학생을 위한 필수 지원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통과의 의미를 평가했다. /유호상 기자

군산 경제위기 극복 위해 고용위기 지정 추가 연장해야

나기학 도의원 대표발의 대정부 건의안 채택돼

전북도의회가 군산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가연장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22일 제3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기학 의원(환경복지위·군산1)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 지정 추가연장 대정부 건의안'을 가결했다.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 경제에 위기가 닥치자, 지난 2018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처음 지정받았고, 이후 2020년에 이어 올해 12월까지 2차례 연장된 상태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나기학 의원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정부 지원이 강화돼 지역경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그간 정부의 지원으로 지역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며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감소와 인구유출로 지역경제의 위기감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군산지역 경제위기 극복과 군산형 상생 일자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가연장이 꼭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2월 중 심의를 거쳐 추가연장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가축분뇨 악취저감 패러다임 전환을"

황의탁 도의원, '냄새 저감제 첨가 보급' 사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악취의 원인이 되는 가축 먹이에 냄새 저감제를 의무적으로 첨가해 축산농가에 보급하도록 사료관리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안이 전북도의회에서 발의됐다.

황의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22일 3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급증하는 축산냄새 민원에 대응해 악취방지법, 가축분뇨법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천억 원의 직간접적인 예산을 들여 저감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축산 악취를 저감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정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산냄새 저감 사업들이 모두 냄새 발생 후 처리대책만을 고민하고 있는데, 가축분뇨 발생이전에 사료에 냄새 저감제를 첨가해 급이할 경우, 가축분뇨 냄새를 상당히 저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면서 "사료관리법 개정을 통해 사료 제조단계에서부터 의무적으로 냄새 저감제를 섞어 농가에 보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군 및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주체가 돼 김제와 익산의 2개 양돈 농장에서 6개월에 걸쳐 실시한 실험결과에 따르면, 가축먹이에 미생물제를 섞어 공급한 농장의 경우, 그렇지 않은 농장에 비해 악취 저감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결과가 나와 황의탁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

나인권 도의원 "농어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김제2·더불어민주당)은 제3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지난 3년간 저출산 대응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9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자했으나 그 결과는 출산율 최하위라는 초라한 성적표에 불과해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나인원 의원은 "더 이상 전북도가 열악한 출산 인프라 환경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을 주저하거나, 도시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사태를 모른 척해서는 안된다"며 "출산 후 산후조리 일체를 전북도가 책임질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에 권역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종식 도의원 "전북독립운동기념관 건립 필요"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식(군산2) 의원이 22일 제3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 독립운동 역사와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전북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강 이남 지역 중에서 군산에서 가장 먼저 독립 만세운동이 시작됐지만, 이러한 역사가 잘 알려지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군산 3.5만세 운동을 계기로 도내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발발했다는 점에서 전북 3.1독립만세운동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북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선열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북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경찬 도의원 "터미널 주변 주차시설 확대를"

전북도의회 성경찬(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많은 도민이 이용하고 있는 고속버스·시외버스 주변 주차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끈다. 성 의원은 "전주 덕진구에 위치한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은 오랜기간 전북도민은 물론, 전북을 찾는 방문객들이 최우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광역교통 핵심 인프라이지만,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해 이용에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주차장 시설은 78면으로, 이곳에 주차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며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소 300~400면 정도의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근 도의원 "어르신-청년 연결고리 사업 도입"

전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현행 노인일자리 정책을 면밀히 점검해보고, 더 나은 운영방안을 고민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공형일자리의 경우, 여전히 단순 소일거리 중심으로 사실상 '단기 아르바이트'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관리 방식의 경우에도 몸이 편찮은 어르신들이 직접 서명하는 등 비효율적인 방식보다는 전자화하는 등 어르신들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지했다. 이어, 노인일자리 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해 '어르신-청년 연결고리 사업'의 도입을 제안했다. /유호상 기자

"국가균형발전·국민안전정책 의지 갖고 추진할 것"

김윤덕 의원, 국토부 노조 평가 국감 우수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 국토교통위원)이 국토교통부노동조합에서 선정하는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최종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은 김윤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국토교통 분야 현안에 대한 정책제안, 비전제시 등에 탁월한 두각을 나타내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공항공사 등 정부 주요 기관 국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 개선 등)'을 주제로 한 정책질의와 문제를 제기해 남다른 성과를 거뒀다.

특히, 경기도 국정감사(지방2반) 간사역을 수행하며 '대장동 의혹' 관련, 여당 대선후보 흔들기에 나선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조작된 내용에 단호히 대응, 많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으며, 당시 질의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110만회의 구독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전북 지킴이로 중장기 SOC 사업 종합계획(제4차 국가철도망, 제5차 국도·국지도, 제2차 국가도로망 및 고속도로 건설 계획 등)의 전북 현안 사업의 국가예산 반영과 추진상황을 점검했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대책 마련', '새만금 개발사업의 조속추진', '호남고속철 지반침하 보수 공사 하세월' 등을 세밀하게 지적해 지역 언론의 호평을 받은바 있다.

김윤덕 의원은 "민생·안전 문제는 임기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안전정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제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상임위를 통해 이와 관련한 입법 정책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국토교통위원회의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노동자들이 국정감사에서 맹활약상을 펼친 의원들을 직접 선정했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이 선정하는 우수의원과는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호상 기자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전주시장 선거 출마 선언 이후, 첫 번째 행보로 '전주 기업 릴레이 탐방'을 시작한 가운데, 기업 릴레이 첫 일정으로 전주페이퍼를 찾았다. 사진은 우 전 부지사가 전주페이퍼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전주 발전은 기업 중심, 행정·대학 뒷받침으로'

우범기 전 정무부지사 전주시장 출마 선언 후 첫 행보로 전주페이퍼 찾아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전주시장 선거 출마 선언 이후, 첫 번째 행보로 '전주 기업 릴레이 탐방'을 시작했다.

'전주 기업 릴레이 탐방'은 전주 지역 기업을 순차적으로 돌아보고, 강한 경제를 위해 기업, 대학, 연구소, 지자체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도시의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자는 데 있다.

행정은 기업 성장 뒷받침이 최우선이고, 대학도 학문과 연구를 위한 상아탑에서 미래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이다.

우 전 부지사는 '전주기업 릴레이 탐방' 첫 일정으로 지난 18일, 본사가 전주에 있는 기업 중 가장 오래 된 대표 향토기업 '전주페이퍼'를 방문했다.

전주 팔복동산업단지에 위치해 있는 '전주페이퍼'는 지난 1965년 '새한제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내 신문용지 산업을 이끌어 온 국내 종이 역사의 주역이자, 천 년 전주의 부흥을 함께 했던 곳이기에 첫걸음을 두는 데 의미를 더했다.

우 전 부지사는 이날 전주페이퍼 김경식 공장장을 비롯한 간부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전주페이퍼가 외부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전북 최고 향토기업의 자존심을 되살렸다"면서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중심'이 돼야 한다. 이제 행정과 대학은 '전주페이퍼'와 같은 잠재력 있는 기업을 발판으로 재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 연관의 협력 모델을 만드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랬을 때 작게는 전주가, 크게는 전북이 발전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전주지역 기업 탐방을 통해 많은 기업인을 만나 의견을 듣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발전했으면 한다"면서 "기업이 에너지 자립형 공장으로 바꿔 나가려고 할 경우, 지역 산업 발전과 경제적 효과 창출을 위해 행정에서 충분히 해결책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전주페이퍼 김경식 공장장은 "전주페이퍼 경영방침은 '공존하는 일터'다. 힘든 코로나 시기에도 잘 버텨올 수 있었던 이유이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인 만큼 기업이 살아나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 또한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靑 "국민과의 대화 대본 있었다? 전혀 사실 아니다"

"답변자 사전 지정하는 건 불가능한 구조 국민들도 납득"

문 대통령 베이징올림픽 참석 여부엔 원론적 입장만

청와대는 22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한 '2021 국민과의 대화'에 대본이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질문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없었고, 답변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것을 시청하고 계신 국민들도 다 수긍(납득)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KBS노동조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장관들에게 대신 답변하도록 안내하는 멘트가 적시된 자료를 공개, 자료에 명시된 장관들만 실제 방송에 등장했다며 '대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민패널 예상 질문'란은 빈칸이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용에 대해선 저를 포함한 청와대가 관여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무선에서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질문은 (나중에 대통령이) 보충 질문 혹은 보충 답변했으면 좋겠다, 이정도만 저희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 문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되고, 동북아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이와 관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또한 YTN '뉴스N이슈'에 출연해 "늘 선린우호 외교원칙을 갖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임하고 있다"면서 "그것(베이징올림픽 참석)에 대해서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고 한 바 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